



완주·전주 상생발전 법제화... 새역사 쓴다

도·전주시·전주지역 정치권, 통합 총력전

105개 상생방안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지역 정치권은 21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사진 3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국회의원과 이성운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추진에 매진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김운덕 의원도 뜻을 함께했으나 국토부장관 청문회 준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통합의 핵심은 주민이 제안하고 합의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며 이성운 국회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주민 간의 약속을 법으로 담아내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도에서는 상생 법안 명문화와 함께 완주·전주 통합과 연계해 정부와 국회에 '거점 특례시 지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이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통합 재원 대책으로 과거 청주·청원 사례(100분의 6을 10년 요구)보다 높은 100분의 10을 15년간 요구, 약 1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들며 "청원과 청주가 세 번 실패 끝에 결국 통합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 사례처럼, 이제는 전북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AI 선도지역으로서 전북의 역할과 완주·전주 통합이 가져올 엄청난 시너지를 역설하며, 전북이 세계적인 디지털 AI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이 폭력이나 비난 없이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미래를 위한 희망의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 삼례읍으로 전입인고를 마치고 '주민 주도형 통합'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105개 상생과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해 법적 효력을 갖춘 이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 이행 점검위원회를 완주군 2/3, 전주시 1/3 비율로 구성해 완주 군민의 시각에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채무 문제에 대해 "채버리고 사라지는 적자성 부채와 도시의 자산으로 남는 건전한 채무로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시의 6,000억원 채무 중 약 3,000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民生회복 소비쿠폰 지원 첫날

토지 매입 등 공공재 성격의 재정 투입으로 이루어진 자산성 부채이며, 나머지 대부분도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자산으로 남는 빛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 자산 규모가 11조원이 넘어 전국 200개가 넘는 기초 지자체 중 11번째로 많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 시 완주군민이 전주시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성운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를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할 '생존전략'이자 유일한 길이라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기여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된 '주민 발의형 통합'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주민이

民生회복 소비쿠폰 지원 첫날인 21일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 民生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전북은 인구 약 73만명, 면적 1,027㎢의 대도시권을 보유하게 되어 서울보다 1.7배 넓은 행정 규모를 갖추게 되며 성장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는 것이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통합이 되면 중복 행정기능 효율화, 대규모 시설 투자 및 도시 인프라 재편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기대되며,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윈스톱 행정 등 생활 서비스 향상도 예상된다.

나이가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전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중심과 배후가 연결되는 새로운 자치모델로서 '구조적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통합에 따른 주민 권익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도의회와 함께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이미 제정해 세출 예산 비율 유지, 교육·복지·농업 예산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엔 제출한 통합건의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오는 8월이나 9월경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과 서남용 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 통합의 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말도등대 전경

<사진=군산시청 제공>

외딴섬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되다

해수부 최종 선정
서해권 K관광 핵심
랜드마크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 말도등대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3개 무인화 등대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2곳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등대 해양문화공간이 대부분 육지 또는 연륙지에만 조성되던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외딴 도서지역에 조성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말도등대의 역사성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적 상징성을 적극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이끌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총 40억원을 투입해 말도등대 일원을 해양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완공 예정인 고

군산군도 해상인도교와 K-관광

섬 사업, 새만금 관광·크루즈

산업과 연계해 도서지역 특유의

고립성과 모험성을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9일 예정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실시계획서 채택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국회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9일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위원들은 각종 부동산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과 관련,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측은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라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 4년동안 국회 국토위에서 갈고닦은 경험을 되살려 청문위원

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청문회를 임할 예

정이다.

여야 합의로 3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8월초 장관으로 취임,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는 3선 의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당내 대표적인 친명인사로 손꼽히고 있으며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5극3특'을 바탕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대광법) 로드맵 설계에도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지만 완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대통령 뜻을 생각해 보면 탁상위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LH(주택토지공사)에 대해 "기존 직원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관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앞두고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